



EU 재무장관회의 취소 결정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EU 상임의장국 대변인은 10월 26일 예정되었던 EU 재무장관회의가 취소되었음을 10월 25일 밝힘.

- 통상적으로 EU 정상회담 직전에 중요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하여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나, 10월 26일 재무장관회의는 열지 않기로 결정하였음.
- EU 집행위원회는 취소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나 EU 회원국 재정위기와 관련한 종합대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.
- 한편, 재정위기와 관련한 종합대책 논의는 10월 26일 정상회담에서 계속될 것이고 추가 논의가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여, 정상회담은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재무장관회의는 정상회담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■ 일부 전문가들은 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자본확충, 그리스 국채 손실부담, EFSF(유럽재정안정기금) 확대 방안 등의 안건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

- 은행 자본을 1,070~1,080억 유로 확충하여 핵심자기자본비율(core capital tier one)을 9%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나, 확충해야 할 자본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- 민간 채권단의 그리스 국채 손실부담의 경우 기존 21%에서 50%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.
- EFSF를 4,400억 유로에서 1~2조 유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, 확대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는 논쟁 중인 것으로 알려짐.
 - 특히, EFSF 은행화를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안으로 유로존 국채매입 보증 방안과 IMF가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(SPV)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.

(FT 등, 10/25)